

# 與 대표출신이 법무장관? 한국당, 추미애 '압박' 예고

한국당, 선거중립내각 구성 요구...與, 불법 은폐 우려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충돌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번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 간사 송기현 의원과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 후보자가 빠르게 임명되길 원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문재인 정

부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 지명 자체가 잘못된 인사라고 본다. 당 대표를 지냈던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검찰개혁 수사특위위원회'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등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추 후보자가 검찰의 울산시 장 선거 개입 등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와 조 전 장관과 가족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4+1 협의체의 협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로텐더홀 농성과 정의투쟁을 연이어 전개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추 후보자에 대해 "선거 관련 형사 사수는 법무부에서 진행한다"며 "법무부 책임자 자리에 여당 전 대표를 앉히면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의 불법 사례는 전부 은폐하고 한국당만 표적 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과 전 민주당 대표를 지낸 현역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며 "이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권관선거를 할 수 있는 인사"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선거 관련 사안을 수사지휘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당 대표 출신이 되는 것이 말이 되나. 선거개입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 아닌가"라며 "검찰개혁의 책임자는 임명 이유가 될 수 없다.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월가월부하면 오히려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4+1' 협상관 흔드는 與...석패율제, 중진 구제책일까 중진이라도 당선자와 표차이 근소해야...5% 득표율도 넘어야

'4+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석패율제를 두고 '중진 구제책'이라며 돌연 강하게 반대하면서 협상관을 뒤흔들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1 협의체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원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이들 4+1 정당 사이에선 석패율 적용 의식을 3석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다뤄지고 있다고 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이 내년까지 이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의 개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4+1 협의체 복수의 관계자들은 "지역구 당선자와 가장 근접한 표 차이로 떨어진 후보자가 석패율제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서 석패율이란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의 득표수를 당선인의 득표수로 나눈 비율이다.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선인과 근소한 표 차로 졌다는 의미다.

원안은 '석패율 적용 순위는 당선인으로 될 순위의 후보자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전 순위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그다음으로 석패율이 높은 후보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은 표차로 아깝게 졌다는 '석패' (惜敗)의 본래 뜻대로 중진이든 초선이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제될 길이 열려 있다

는 얘기다. 한 권역에서 중진 후보자의 석패율이 같은 당의 다른 후보자에 비해 낮다면 석패율제를 통해서 당선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원안은 '석패율 적용 순위에 해당 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모두를 등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뒤서 각 정당이 지역구 출마자 '전부'를 석패율 후보자로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아울러 중진이라도 하더라도 석패율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지역구 선거에서 5% 득표율을 넘어야 한다. 이에 미달하면 석패율로 당선될 수 없도록 한 원안의 제한 규정 탓이다.

민주당이 '석패율은 중진 구제책'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협상이 막다른 길에 봉착하자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당들은 석패율제가 중진 국회의원을 비껴가도록 하자는 제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 봐 걱정한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으며, 유성열 대안신당(가칭) 창당 준비위원장도 "석패율에 대해서는 후보자 중 중진을 제외한 청년, 여성, 정치신인 순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0일) 구두 논평을 통해 "석패율제는 제도 개선(改善)이 아니라 개악(改惡)으로 보고 있다"면서 "석패율제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의 중재안을 두고서도 "그러면 비례대표를 뽑으면 되지 석패율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신보라, 정의당 '몸 대주는' 발언 비판...“정의로운 척하다 사고”

"위선과 정의, 계속 증명" 신보라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 위원이 22일 정의당의 '몸 대주는' 발언에 대해 "정의로운 척하다 이런 사고가 난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과 똑같다. 조적조, 이제 정적정적이다. 예견된

일 아닌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공식 트위터에 "한미 방위비분담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오만함과 무도함 그 자체다.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신 최고위원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아물랑 선거법을 말할 때,

제 살공리만 찾는 이중등복제를 말할 때 비례한국당 의견이 나오자 '주권자의 뜻을 대놓고 왜곡한다'고 해고서는 지난 선거 때 내놓고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정의당을 광고하며 스스로 위성정당화했던 과거가 들끓을 때, 정의당의 위선과 불의는 계속 증명돼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지원 "똥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안돼...석패율제 버려야"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2일 "똥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상대방은 굶어 죽으라는 그런 정치는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석패율은 민주당에 양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시작해도 크게 진전된 개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과거 양당제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석패율제가 필요했지만, 현재 사실상 다당제이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석패율은 버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

도 연구하고, 더욱이 수십 년 경험과 12년여 야당 경험도 가졌다"며 "다급하면 헛발질과 실수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협상 테이블에) 안 들어온다. '4+1'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어차피 20대 국회는 종쳤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